

경찰국 신설 일파만파... 경찰, 국회서 '근조 시위'

'사의표명' 김창룡청장 "제도 근간 변화시키는 것" 반발 정부 '장관 지휘 필요 최소한 조직' 신설 '직접 경찰 통제' 야권에선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거센 압박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등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정부와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통제 강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기미도 엿보이고 있다.

임기가 한 달 가까이 남은 현직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경찰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 국회에 모이는 등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한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의원면직서는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표를 정식 제출하면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징계 심사 계류 여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당일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만큼 김 청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같은 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강화 계획 브리핑에 앞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 장관과 100여분 간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법 취지를 설명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사의를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남홍수 기자

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날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추진 방안과 관련 "현행 법령·추진 필요성·유사 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 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와 함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도 다음 달 15일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조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을 폐지했기 때문에 경찰을 지휘·

감독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선 해당 법을 두고 찬반 쟁점 토론이 한창이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을 오히려 정권에 예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마저 야당의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권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안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아 치안 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라며 "특히 이 법이 다른 행정기관과 다르게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던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장관이 31년 전으로 퇴행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라며 "정부조직법과 경찰청 법을 명백히 위배하고 법치주의 훼손을 감행하는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

추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행안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비번 또는 휴가를 낸 50여명의 경찰관이 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토론회장 입구에선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나눠 주기도 했다.

경찰 일가에서는 지난해부터 1인시위 및 피켓 시위와 조기 계약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전면 반대 중이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여권 인사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옹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청장이)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휘방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둔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이준석, 시사패널 편들며 장제원 저격 "비판에 성역 없다"

장성철 교수 "비판했다고 장제원이 방송국에 항의" "잘못 알고 비판한 부분 있으면 직접 연락달라"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윤석열(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자 친윤계 핵심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또다시 겨냥해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사패널들은 누구든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로 활약중인 장성철 가톨릭대 특임교수가 자신이 방송에서 장 의원을 비판하자 장 의원이 방송국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주장한 글을 언급하며 장 의원을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교수의 글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제가 시사 패널 세상은 좁아는 편인데 이준석 비

판은 아무리 해도 따로 방송국이나 패널들께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다른 곳이라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사 패널들은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호소하며 "어차피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장제원 같은 분은 정권에 위협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무서워서 방

송 패널을 못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 교수는 "장 의원님! 방송 못 하게 하시면 안 할게요"라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비판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장 교수는 전날 MBC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장 의원이 주도한 친윤계 공부 모임인 '미래혁신포럼'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 당 대표가 아닌 우리가 당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장 교수는 이어 "내년 혹은 올해 있을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때 우리 힘으로 당 대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들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박주민 "원구성되면 먼저 낙태 입법 시작해야"

"美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 두고 마음 급해져" "여성 자기결정권·건강권, 진영 논리로 나눌 수 없는 가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는대로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국회 원구성 함께 가장 먼저 낙태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며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가져 오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라며 "현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개

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음에도 아직 임신 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결정을 두고 마음이 급해진다며 "얼마 전 국민의힘 주최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이 주제였다고 한다. 미국의 현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시켜 온 여성 인권을 과거로 되돌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 없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은 진영 논리로 나누어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www.peoplelife.co.kr

같이 함께 성장할 최고의 '피플라이프' 가족을 초빙합니다

보험 컨설턴트 채용

- 모집분야: ① 개인사업자-개인영업채널, 법인영업채널 ② 근로소득자(정규직) - OTC, EFA
- 모집채널: ① FA(Financial Advisor) / 지점장 / 사업단장 / 본부장 ② 정규직 상담매니저(OTC, EFA)
- 특별지원
 - FA: 초기 정착지원금, 직전년도 소득의 20%~50% (약월 일시 지급)
 - 매니저: 계층별 초기 정착수수료 최저 지원 (1년간)
 - OTC, EFA 상담매니저(정규직): 기본급(250만원) + 인센티브 + 사책
 - EFA 사업단장(정규직): 기본급(500만원) + 인센티브
 - EFA DB지원: 매월 활동 DB 20~40개 무상 지원
- 승진기회: OTC_ 상담매니저 → 지점장 → 지역장 → 본부장(임원)
EFA_ 상담매니저 → 수석 → 사업단장 → 본부장(임원)
- 근무지역: 전국대도시 및 광역권별

※ OTC: 국내최초 내방형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 EFA: 국내최초 찾아가는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피플라이프 검색 02-2251-6817

피플라이프는 18년 업력의 4대 경쟁력을 보유한(분업화, 컨설팅화, 네트워크, 교육시스템) 명실상부 최고의 GA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험클리닉, CEO클리닉 등의 브랜드를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개인 및 기업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추천 및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